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 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7가지 과제



장애인정책리포트

월간 **한국장총** 2021.06.30. _ Vol.408

함께하는 회원단체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신장장애인협회,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한국장루장애인협회, 한국한센총연합회,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한국장애인선교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전국산재장애인단체연합회, 한국장애인기업협회, 장애인문화예술진흥개발원,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부산장애인총연합회, 인천장애인단체총연합회, 광주장애인총연합회,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 울산장애인총연합회, 강원도장애인단체연합회, 충청북도장애인단체연합회, 충청남도장애인단체연합회, 전라남도장애인단체총연합회, 경상남도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경상남도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총연합회, 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단체연합회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 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7가지 과제

글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남궁 은 팀장

문재인 정부가 출범 4주년을 지나 이제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다.

촛불민심으로 출범하여 내 삶을 책임지는 포용국가를 만들겠다는 약속과 함께 약자의 편에 서있는 대통령이라는 기대가 어느 때보다 컸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환경을 만들겠다는 약속으로 시작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년 동안 이룬 것은 무엇이고 남아있는 과제는 무엇일까?

문재인 대통령의 장애인 공약과 국정과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의 이행결과를 통해 장애인정책의 변화와 성과를 진단하고 점검해보고자 한다.



01 장애인정책을 이끌어온 장애인운동

■ 선거마다 어김없이, 2017대선장애인연대 구성

- 참정권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이지만 수많은 선거과정에서 장애인은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부터 투표장에 가기까지 다양한 차별을 겪어왔음
- 장애계는 장애인 정책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2000년부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대통령선거 등 매 선거마다 유권자운동을 펼쳐왔음
- 19대 대선에서도 '2017대선장애인연대'*를 통해 장애인친화적인 정책 개발, 장애계 우선순위 과제에 대한 대선 공약화, 참정권 보장 활동 등을 전개하였음

* "복지는 정치다"를 모토로 전국 1,415개의 장애인 단체 참여. 15개의 요구공약 개발

■ 정부 중장기계획에 대한 최초의 초안 선제안

-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1998년 수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장애인정책 중장기 계획으로 장애인 복지법에 근거하여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관계 정부부처가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있음
- 지금까지 장애인정책은 정부 주도로 이루어져 장애인 관점의 정책목표 수립 미흡, 장애인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장애계는 2017년 4월, 27개 단체가 참여하여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안을 최초로 정부에 먼저 제안하였음

* "평등한 사회참여를 통한 보통의 삶 실현"을 비전으로 4대 정책목표, 31대 중점과제, 73대 추진과제 제시

- 정부의 계획 수립 이전에 장애계가 먼저 초안을

만들어 제시함으로써 장애당사자 관점에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정책계획 수립과정에 공식적으로 참여한 의의가 있음¹

02 문재인 정부의 장애인정책 계획

■ 문재인 대통령 장애인 공약

-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선공약집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환경을 만들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9개 공약 제시

* ▲장애인 권리보장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 ▲장애인 고용 활성화 정책 및 장애인연금 확대, ▲장애인 활동지원 및 의료지원 확대, ▲장애인 교육·문화권 확대, ▲장애인 지역사회 정착생활 환경 조성, ▲여성장애인지원법 제정, ▲장애인의 방송 접근권 확대 및 미디어 복지 강화, ▲장애인 가족 지원 확대, ▲범죄시설 폐지 및 탈시설정책 추진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대구희망원 문제 해결

■ 문재인 대통령 장애인 국정과제

- 문재인 대통령은 100대 국정과제를 제시하였고, 42번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과제에 "장애인 지원 강화"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였음

* 장애인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도입 추진 :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보조기 건강보험 급여적용 확대, 권역별 어린이 재활병원 설치 등 의료지원 확대, ▲탈시설 등 지역사회 정착 환경 조성

■ 문재인 정부의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

-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계획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라는 비전하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삶의 격차를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5대 분야 22개 중점과제 70개 세부과제를 제시하였음

¹ 정부가 발표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 추진경과에 당사자 참여보장 과정으로 명시

03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장애인정책 변화

- 장애인 관련 법과 제도가 확충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장애인정책은 확대되고 있음
- 어떤 정부가 더 나은 성과를 보였는지는 개인의 가치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대적 평가는 지양하고 제도별 변화율과 정도를 비교하여 장애인정책 변화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자 함
- 문재인 정부 임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변화의 기준을 잡기 위해 전 정부와 비교하였음. 기준 시점은 박근혜 정부는 2013년부터 2016년 말까지로 하였고, 문재인 정부는 2017년부터 2019년 말까지로 하되 보다 최신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였음

■ 주요 지표 비교 (양적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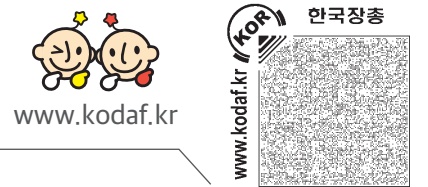
- 문재인 정부의 눈에 띄는 제도 변화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활동보조 단가가 9,240원에서 14,020원으로 51.7% 증가한 것과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206,050원에서 30만원으로 45.6% 증가한 것임
- 박근혜 정부에서는 장애인복지예산이 35.8% 향상되었고,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96,800원 20만원으로 2배 이상 크게 증가하였음. 장애인 가구 경상소득²이 22.7% 증가하였으며, 열린 관광지 조성을 시작하였음. 이 밖에 저상버스 도입률 31.0%, 특별교통수단 도입률 64.0%, 장애인생활체육참여율 43.9% 향상되었음

² 일정하고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
³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대비 장애인복지 예산 비율



표1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장애인정책 양적 변화 비교

구분	박근혜정부 ('13.2~'17.3)	증감률	문재인정부 ('17.5~현재)	증감률
등록 장애인구	2,501,112명('13) → 2,511,051명('16)	0.4% 증가	2,545,637명('17) → 2,633,026명('20)	3.4% 증가
장애인 복지 예산 ³	4.16%('13) → 5.65%('16)	35.8% 증가	5.80%('17) → 6.31%('20)	8.8% 증가
장애인 연금	수급자수 : 305,394명('13) → 336,224명('16) 기초급여 : 96,800원('13.4) → 20만원('14.7) → 204,010원('16.4)	10.1% 증가 110.8% 증가	수급자수 : 343,662명('17) → 368,716명('19) 기초급여 : 206,050원('17.4) → 25만원('18.4) → 30만원('19.4~)	7.3% 증가 45.6% 증가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활동보조 단가 : 8,550원('13) → 9,000원('16) 월평균 급여량 : 93.9만원('13) → 110.9만원('16) 이용인원 : 48,335명('13) → 71,636명('16)	5.3% 증가 18.1% 증가 48.2% 증가	활동보조 단가 : 9,240원('17) → 14,020원('21) 월평균 급여량 : 113.0만원('17) → 160.3만원('19) 이용인원 : 72,193명('17) → 105,569명('19)	51.7% 증가 41.9% 증가 46.2% 증가
건강검진 수검률	59.6%('13) → 4.8%('16)	8.7% 증가	64.9%('17) → 8.5%('19)	5.6% 증가
이동권	편의시설 적합설치율 : 68.6%('13) → 2.5%('16) 교통수단 편의시설 설치율 : 72.4%('13) → 77.4%('16)	5.7% 증가 6.9% 증가	편의시설 적합설치율 : 78.3%('17) → 79.4%('19) 교통수단 편의시설 설치율 : 82.0%('17) → 78.3%('19)	1.4% 증가 4.5% 감소
	여객시설 편의시설 설치율 : 63.4%('13) → 67.8%('16) 보행환경 편의시설 설치율 : 62.6%('13) → 72.2%('16)	6.9% 증가 15.3% 증가	여객시설 편의시설 설치율 : 74.9%('17) → 78.5%('19) 보행환경 편의시설 설치율 : 78.0%('17) → 81.3%('19)	4.8% 증가 4.2% 증가
	저상버스 도입률 : 14.5%('13) → 19.0%('16) 특별교통수단 도입률 : 63.0%('13) → 103.3%('16)	31.0% 증가 64.0% 증가	저상버스 도입률 : 22.4%('17) → 26.5%('19) 편의시설 적합설치율 : 126.0%('17) → 73.6%('19)	18.3% 증가 41.6% 감소
	장애인 의무고용률 : 2.48%('13) → .66%('16) 경제활동 참가율 : 38.3%('13) → 8.5%('16)	7.3% 증가 0.5% 감소	장애인의무고용률 : 2.76%('17) → 2.92%('19) 경제활동 참가율 : 38.7%('17) → 37.3%('19)	5.8% 증가 3.6% 감소
교육	장애인가구 경상소득 : 2,864만원('13) → 3,513만원('16)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 : 58.6%('13) → 65.9%('16)	22.7% 증가 12.5% 증가	장애인가구 경상소득 : 4,093만원('17) → 4,153만원('19)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 : 67.2%('17) → 79.3%('20)	1.5% 증가 18.0% 증가
	특수학교 수 : 162개교('13) → 170개교('16) 특수학급 수 : 6,915개교('13) → 7,543개교('16)	4.9% 증가 9.1% 증가	특수학교 수 : 173개교('17) → 182개교('20) 특수학급 수 : 7,799개교('17) → 8,523개교('20)	5.2% 증가 9.3% 증가
	교육기관 편의시설 설치현황 : 81.4%('13) → 91.4%('16)	12.3% 증가	교육기관 편의시설 설치현황 : 91.5%('17) → 91.3%('19)	0.2% 감소
문화 여가	장애인생활체육 참여율 : 12.3%('13) → 17.7%('16)	43.9% 증가	장애인생활체육 참여율 : 20.1%('17) → 4.2%('20)	20.4% 증가



문화 여가	열린관광지 조성 : 0개소('13) → 6개소('15) → 5개소('16) / 11개소 증가	1,100% 증가	열린관광지 조성 : 6개소('17) → 12개소('18) → 20개소('19) → 23개소('20) → 20개소('21) / 81개소 증가	736.4% 증가
-------	---	-----------	---	-----------

한국장애인개발원 연도별 장애통계연보 참조

■ 주요 정책 비교 (질적 변화)

- 문재인 정부의 장애인정책의 가장 큰 변화는 장애 등급제 폐지를 시행한 것임. 이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자격, 특별교통수단 이용자격 등이 완화됨. 뚜렛증후군,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등 일부 유형의 장애판정기준 완화
- 65세 이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급여 감소분에 대한 보전 시작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30만원 지원을 계획 대비 조기 달성
- 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 등 장애인건강권 관련 사업 추진
-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성인 주간활동서비스, 청소년 방과후활동서비스 도입
- 특별교통수단의 지자체별 상이한 운영방식을 표준화하기 위해 특별교통수단 표준 조례를 마련하고, 특별교통수단 대상자 및 운행대수를 확대함. 휠체어 탑승 가능한 고속버스 시범운영 등 이동권 변화 추진
- 교육부 내 진로 및 평생교육 전담부서(장애학생 진로평생교육팀)를 설치하고,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를 설립하였음. 장애아동, 장애학생 인권과 진로·직업교육, 장애대학생 지원, 평생교육 등 분야별 종합계획 발표
- 평창패럴림픽 이후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반다비체육센터를 건립하고 있으며,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법 제정
- 박근혜 정부는 발달장애인법, 장애인건강권법, 장애인보조기기법, 한국수화언어법, 점자법 등 다양한 영역의 각종 장애 관련 법률 제정

표2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장애인정책 질적 변화 비교

구분	박근혜정부('13.2~'17.3)	문재인정부('17.5~현재)
장애 등록 및 판정	· 국가유공상이등급자 장애등록 허용('15.5)	· 난민인정자 장애등록 허용('18.3) · 장애등급제 폐지 및 서비스 지원종합조사 도입('19.7) · 뚜렛증후군환자 장애등록 인정('20.5) ·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2단계 개편 추진('20.7) ·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등 장애 정도 인정기준 완화('21.4)
장애인 연금	대상 : 1·2급 → 3급 중복장애인까지 확대('14.7)	-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와 신설('13.3) · 대상 : 만6세 이상 65세 미만 모든 등록장애인으로 완화('19.7) → 3급 까지 확대('15.6)	· 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 보장('18.7) · 대상 : 만6세 이상 65세 미만 모든 등록장애인으로 완화('19.7) · 65세 이후 급여감소 보전 시작('21.1)
건강 및 의료 지원	· 장애인건강권법 제정('15.12) · 시행('17.12) · 장애인보조기기법 제정('15.12) · 시행('16.12)	· 장애인건강차치의 시범사업('18.5~) ·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16개소 지정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10개소 확충 · 장애인감염병 대응 매뉴얼 마련('20.6), 국립재활원 장애인전담병상 마련('21.1)
장애 유형별 정책	· 성년후견제 시행('13.7) · 발달장애인법 제정('14.5) · 시행('15.11)	·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 대책 수립('18.9) ·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실시('19.3) ·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 서비스 실시('19.9)
	· 한국수화언어법 제정('16.2) · 시행('16.8) · 시각장애인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 서명('14.6) · 점자법 제정('16.5) *시행('17.5)	· 코로나19 브리핑 수어통역 제공('20.2), 국회 수어통역 공식지원 실시('20.8) · 선거방송에서 자막 및 수어통역 의무 배치, 공식선거법 개정('20.12) · 제1회 한국수어의날 기념식 개최('21.2)
이동권	· 정신건강종합대책 수립('16.2) · 정신건강증진법 전부개정('16.5) · 시행('17.5)	· 점자형 선거공보를 책자형의 2배 이내 작성 허용('20.12) ·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 사업 정신질환자 분야 시행('19.6) ·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021~2025) 수립('21.1)
	· 국립교통재활병원 개소('14.10) · 인천공항 교통약자 패스트트랙 서비스 실시('15.3)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표준 조례 마련('18.9) · 휠체어 탑승 가능한 고속버스 시범사업('19.10) ·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및 운행대수 확대 : 1·2급 장애인, 인구 200명당 1대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명당 1대로 완화('20.7)
고용	·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서비스 본인 부담금 인하('13.3) · 장애인의무고용률 상향 : 기타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2.5% → 3%('14) · 장애인 출퇴근용 차량개조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14) · 서울맞춤훈련센터 개소('14.11)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장애인고용 부담금 부과('16.1) · 청각장애인 전용 직업훈련센터 개관('16.9), 발달장애인 전용 직업훈련센터 개관('16.12)	· 발달장애인 위한 알기 쉬운 노동법 발간('17.11), 발달장애인용 산업안전보건 교육자료 발간('20.1) · 직업재활시설 저임금 장애인 노동자 지원방안 발표('19.12) ·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정책 강화방안 발표('20.5) · 장애인 다수 고용 사업장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20.6) ·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 발표('21.3)

교육	· 평생교육법 개정 : 장애인 평생교육 규정 포함('16.5) *시행('17.5)	· 교육부 내 장애인 진로교육 전담부서 설치('18) ·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설립('18.5) ·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대책 발표('18.12) ·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활성화 방안(20~22) 발표('19.11) ·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2020~2022) 발표('19.12) ·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활성화 방안(20~22) 발표('20.2) · 장애아동 지원 종합대책 발표('21.5)
문화 여가	· 관광진흥법 개정 : 장애인 관광활동 지원 조항 포함('14.5) *시행('14.11) · 장애인한국민체육센터 개관('15.5) · 장애인문화예술센터 '이음' 개관('15.11)	·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발표('18.8) ·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 30개소('19) → 23개소('20)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법 제정('20.6)
정보 접근성	· 취약계층 정보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 발표('17.1)	· 디지털 포용 추진계획 의결('20.6)

각 정부부처 보도자료 참조

04 문재인 정부의 장애인정책 이행 결과

■ 장애인공약 이행 결과

- 2017대선장애인연대에서 요구한 장애인공약과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선공약집에서 제시한 장애인공약을 비교하여 이행결과를 살펴보았음
- 문재인 대통령의 9개의 장애인 공약 중 2017대선 장애인연대에서 요구한 15개 공약은 총 6개가 반영되었음
- 추진결과는 **추진중**과 **일부추진**, **미추진**으로 구분하였으며, 추진중 공약 3개, 일부추진 공약 4개, 미추진 공약 2개로 공약 이행을 위해 분발이 필요함

표3 문재인 대통령 장애인공약 이행 결과 요약

문재인 대통령 공약	장애계 요구 공약 ⁴	추진결과
장애인 권리보장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	반영	추진중
장애인 고용 활성화 정책 및 장애인연금 확대	일부반영	일부추진 (장애인근로자 최저 임금 보전 대책 부재,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현실화 미추진)
장애인활동지원 및 의료지원 확대	-	일부추진 (활동지원 24시간 확대 미추진)

장애인 교육·문화권 확대	반영	추진중
장애인 지역사회 정착생활 환경 조성	반영	미추진 (탈시설 관련 정책, 유니버설 디자인 환경 조성 관련 이행실적 확인 불가)
여성장애인지원법 제정	반영	미추진 (법 제정, 여성장애인 기본 계획, 임신·출산 양육 확대 미진행)
장애인의 방송 접근권 확대 및 미디어 복지 강화	미반영	일부추진 (장애인미디어 지원센터 설립 및 장애인 방송전문인력 양성 미진행)
장애인 가족 지원 확대	-	일부추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확충 미진행)
범죄 시설 폐지 및 탈시설 정책 추진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대구희망원 문제 해결	-	추진중

1) 장애인 권리보장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

❖ 문재인 대통령 공약

-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 장애등급제 폐지 및 장애인의 욕구·환경 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과 연계하여 등급제 단계적 폐지

❖ 장애계 요구 공약

- ① 장애인 인권 및 권리보장 대책 수립 : 사회적 모델에 입각한 새로운 장애정의 도입, 장애인 탈시설 및 자립생활 지원체계 전면 개선, 장애인 권리침해 방지 및 권리옹호 체계 구축
- ② 개인별 욕구 및 권리 기반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 종합계획 수립

❖ 반영 및 이행 결과 : 공약 반영 / 추진중

-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추진중(민관협의체 운영 '21.2월~), 장애인 권리침해 방지 및 권리옹호체계 수립 검토중
-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1차(일상생활 서비스), 2차(이동지원 서비스) 도입. '22년 3차(소득·고용지원 서비스) 도입 예정

2) 장애인 고용 활성화 정책 및 장애인연금 확대

❖ 문재인 대통령 공약

- 장애인근로자 의무고용제도, 중증장애인 우선

구매제도, 장애인공무원 및 사회적 기업 확대 추진, 근로지원인·보조공학·고용장려금 확대 등 중증장애인 고용 지원 강화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월 30만원으로 인상(국민연금 A값의 10%→15%)하고, 부가급여를 장애 추가비용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현실화

❖ 장애계 요구 공약

- ③ 장애인 근로자 최저임금 보장제도 도입
- ④ 중증장애인 대상 우선 고용정책 수립 : 의무고용률 5% 달성 및 특별계획 수립, 중증장애인통합기업 설치, 중도장애인 직업재활 활성화
- ⑤ 장애인연금 인상 및 대상 확대 : 기초급여 인상(A값의 10%), 부가급여 인상(24만원), 중증장애인 소득하위 80%까지 대상 확대, 경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까지 확대

❖ 반영 및 이행 결과 : 공약 일부 반영 / 일부추진

- 장애인 근로자 최저임금 보장제도 도입 공약 미반영
- 중증 및 경증여성 고용장려금 확대('18~'19).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 대상 월 5만원(6.3천명) 출퇴근비용 지원 신설('21)
- 장애인고용법상 공공부문 의무고용률 '16년부터 3.4% 유지. 지역사회중심 중증장애인통합기업, 중도장애인 직업재활 활성화 실적 확인 어려움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30만원 인상('19.4), 부가급여 현실화 미추진, 대상 확대 미반영

3) 장애인활동지원 및 의료지원 확대

❖ 문재인 대통령 공약

- 최종중이면서 돌봄 가족이 없는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 시간을 24시간으로 늘리고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인하 등 추진
- 장애인보조기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
- 발달재활서비스 이용기준 확대, 인력 기준 등 서비스 질 관리 강화

- 장애인건강주치의 및 장애인보건의료센터 도입 추진
- 권역별 어린이재활병원 및 장애아 재활센터 확충, 치료와 재활·돌봄·교육이 통합된 서비스 제공

❖ 반영 및 이행 결과 : - / 일부추진

- 정부 제공 활동지원서비스는 월 최대 480시간으로 일 평균 16시간 제공. 24시간 추가지원 지자체는 9곳뿐으로 **5** 미이행. 본인부담금 평균 4.03% → 3.35%로 인하('19.7월)
- 수동휠체어, 난청환아 보청기, 의지 기준금액 등 일부 장애인보조기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
-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 전 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17)에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21)로 변경. 제공 인력에 대한 자격 및 인정절차 기준 고시 개정('18.9월)
-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18.5월~).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개소 10개소
- 권역별 어린이재활병원 공모를 통해 '22년까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3개소, 재활의료센터 6개소 건립 예정

4) 장애인 교육·문화권 확대

❖ 문재인 대통령 공약

-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2016년 현재 65% 수준) 및 정규직 교사 채용 등
- 장애학생 교육 및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강화
-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 강화

❖ 장애계 요구 공약

- ⑥ 특수교육지원 종합대책 수립 : 특수교원 연간 1천명 이상 충원, 특수학교 2022년까지 50개소 확충, 전공과 기능 강화 및 지원 확대

❖ 반영 및 이행 결과 : 공약 반영 / 추진중

- 특수교사 정원확보 추진중 : 65.9%('16) → 79.3%('20). 연간 1천명 이상 충원 이행중

⁴ 2017대선장애인연대 공약 반영 결과에 대해 반영, 일부반영, 미반영으로 구분. 2017대선장애인연대 요구공약에 비해당할 경우 - 로 표기

⁵ 윤일규 국회의원 국정감사 자료(2019.10.4.), 에이블뉴스(2019.10.4.) 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 지원 지자체 9곳뿐



- 특수학교 12개소 증가 : 170개('16) → 182개('20)
-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지정 등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 발표('20)
- 발달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문화예술학교 지원 : 16개소 449명('18), 20개소 566명('20)
- 전공과 기능 강화 및 지원 확대는 미반영

5) 장애인 지역사회 정착생활 환경 조성

☞ 문재인 대통령 공약

- 탈시설지원센터 설치, 자립지원금 지원, 임대주택 확충, 탈시설 장애인 부양의무자 규정 적용 우선 폐지 등 추진
- 유니버설디자인 환경 조성 : 장애인 등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 웹 접근권 및 사회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 수립 및 지원

☞ 장애계 요구 공약

- ① 장애인 인권 및 권리보장 대책 수립 : 사회적 모델에 입각한 새로운 장애정의 도입, 장애인 탈시설 및 자립생활 지원체계 전면 개선, 장애인 권리침해 방지 및 권리옹호 체계 구축

☞ 반영 및 이행 결과 : 공약 반영 / 미추진

- 탈시설 관련 정책 미추진 : 탈시설지원센터, 자립지원금, 부양의무자 규정 폐지 등 미진행.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로드맵 '21.8월 발표 예정
- 유니버설디자인 환경 조성 정책 및 실적 확인 어려움

6) 여성장애인지원법 제정

☞ 문재인 대통령 공약

- 성인직적·장애인직적 관점 반영된 기본계획 수립
- 임신·출산 및 양육 등 공공돌봄 서비스 우선 지원과 확대

☞ 장애계 요구 공약

- ⑦ 젠더 관점의 여성장애인 종합지원체계 구축 : 여성장애인 기본계획 수립, 여성장애인 지원

전담부서 설치,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가사지원, 여성장애인 고용할당 50% 준수, 여성장애인 양적·질적 실태조사 실시

☞ 반영 및 이행 결과 : 공약 반영 / 미추진

- 여성장애인지원법 제정논의 없음
- 여성장애인 기본계획 및 전담부서 없음
- 임신, 출산 및 양육, 돌봄지원 확대 없음
- 장애인 부부를 위한 임신·출산 매뉴얼 발간('19.5월)
-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 예정('21)

7) 장애인의 방송 접근권 확대 및 미디어 복지 강화

☞ 문재인 대통령 공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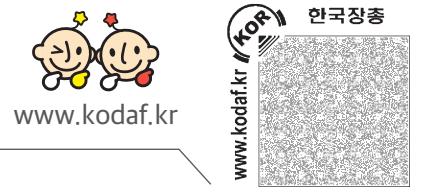
-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수신기 내장형 TV와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 수신기 보급 확대 추진
- 뉴스·선거관련 방송 및 국가재난과 같은 긴급방송의 자막방송 의무화, 수화 및 화면해설 비율의 확대 등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확대 추진
- 장애인의 DMB 및 재난방송, 방송통신 융합매체 접근 환경 마련
- 지역미디어센터 장애인 공간 확대 및 장애인 미디어지원센터 설립 추진
- 장애인 활용이 가능한 방송장비 개발·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 장애계 요구 공약

- ⑧ 장애인 정보 접근성 보장 : 시·청각장애인 멀티미디어 저작물 규제완화 및 지원체계 마련, 점자정보단말기 건강보험급여 지원 장애인보장구 지정, 정보통신서비스 및 정보통신제품 제공 표준지침 개발

☞ 반영 및 이행 결과 : 공약 미반영(정보접근성을 방송 접근권에 국한하여 공약 제시) / 일부추진

- 저소득 시청각장애인용 TV 보급 99% 달성('20)



- 수어영상 크기, 위치 조정 가능한 스마트수어 방송 서비스 개시('19.7월), 재난방송시 한국수어 방송을 신속히 실시하도록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개정('20.3월)
-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공 가이드라인 마련('19.8월)
- 장애인미디어지원센터 설립, 장애인 방송장비 및 전문인력 개발 지원 등 확인 어려움
- 점자정보단말기 건강보험 적용 미반영
- 무인정보단말(키오스크) 표준모듈 개발

8) 장애인 가족 지원 확대

☞ 문재인 대통령 공약

- 장애인부모 무료 상담 지원, 양육정보 시스템 구축
-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확충

☞ 반영 및 이행 결과 : - / 일부추진

- 장애인부모 무료 상담 : 월 20만원 바우처 790명 지원('19)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전산시스템 구축 '21년 진행 예정
-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확충 미진행(지자체별 운영중)

9) 범죄 시설 폐지 및 탈시설 정책 추진을 위한 시범 사업으로 대구희망원 문제 해결

☞ 반영 및 이행 결과 : - / 추진중

- 대구사회서비스원으로 운영주체 변경. 장애인거주시설 '시민마을' 폐쇄('18.12월)
- 대구 남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수행중('19.6월~)

10) 2017대선장애인연대 요구 미반영 공약

- ⑨ OECD 국가 평균 장애인복지 예산 확보(GDP 2%)
- ⑩ 장애인 안전 및 재난 관리를 위한 전담부서 설치

- ⑪ 주거 공급 확대 및 주거권 보장 : 주거정책 5개년 계획 수립, 공공임대주택 확대, 주거비 지원제도 마련, 장애인 전용 금융상품 개발 등 주거권 보장 정책 마련
- ⑫ 장애친화적 장애인 전용 연수원(장애인역량강화센터) 건립
- ⑬ 광역간 이동지원 시스템 구축 : 특별교통수단 이동권역 확대, 장애인콜택시 증차계획 수립
- ⑭ 장애유형별 의사소통지원체계 구축 : 장애유형별 보완대체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제도화 및 예산 확충, 장애유형별 및 연령별 맞춤형 AAC 지원체계 구축, 교사 및 공무원 임용시 AAC 이수교육 프로그램 마련
- ⑮ 대통령 산하 상설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장애인 국정과제 이행 결과

- 문재인 정부의 장애인 국정과제는 완결된 과제 없이 모두 **추진중**인 상황임

1)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도입 추진

- 장애등급제 폐지 및 서비스 지원종합조사 도입('19.7월)
- 수요자중심 장애인지원체계 2단계 개편 및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시행('20.10월)
- * '22년 3단계 개편 '고용 및 소득지원에 대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도입 예정

1)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민관협의체 운영중('21.2-7월 운영 예정)

2) 장애인보조기 건강보험 급여적용 확대

- 활동형, 틸딩형, 리클라이닝형 등 수동휠체어 보험적용 확대('18.7월)
- * (기존) 수동휠체어(480천원) → (변경) 일반형휠체어(480천원), 활동형휠체어(1,000천원), 틸딩형/리클라이닝형 휠체어(800천원)
- 욕창예방방석 및 이동식전동리프트 지급대상 확대('18.7월)



* (기존) 욕창예방방석(지체), 이동식전동리프트(척수, 뇌병변) → (변경) 욕창예방방석, 이동식전동리프트(지체 또는 뇌병변)

- 만2세 이하 선천성 난청 환아 보청기 지원('19)
- 흰지팡이 급여기준액 인상(14→25천원), 저시력 보조안경 내구연한 단축(5년→3년), 돋보기·망원경 검수확인서 제출 생략('19.10월)
- 보청기 제품 개별가격고시제 실시, 급여비용 분리지급('20.7월)
- 의지 급여 기준금액 품목별 평균 22.8% 인상('21.3월)

3 권역별 어린이 재활병원 설치 등 의료지원 확대

- 병원 2개소(수도권), 센터 1개소(제주) 지정 예정
- 기타 장애인 건강권 사업
 - 장애인건강검진 기관 : 16개 지정 → '24 100개소 예정
 -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 : 1차 시범사업('18. 5월~'20. 5월), 2차 시범사업('20. 6월~'21. 5월), 3차 시범사업 예정('21. 9월~)
 - 권역 재활병원 : 6개소 → 10개소 예정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 10개소 → '22년 19개소 예정
 - 장애인화 산부인과 지정 : '21년 8개소 예정 → '24 20개소 예정

4 탈시설 등 지역사회 정착 환경 조성 : 장애인권리 보장법 제정 민관협의체 '통합지원분과'에서 논의중('21. 2~7월 예정)

*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로드맵 '21.8월 발표 예정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이행 결과

-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과 국정과제 등을 고려, 전 정부부처에서 수립하는 중장기 장애인정책계획으로 문재인 정부의

장애인정책에 대한 국정철학과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계획임

- 69개 세부과제⁶가 추진중이며, 2020년까지 이행실적⁷을 기준으로 분야별 성과와 한계를 정리하였음

1) 지역사회 삶이 가능토록 복지·건강서비스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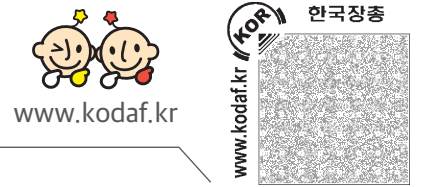
체계 개편

1 장애인등급제 폐지는 이뤘지만 권리보장은 미결

-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정책 변화는 31년간 유지되어온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된 것임. 1~6급의 등급체계가 사라지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로 구분됨
- 장애인등급제 폐지의 목적은 장애인등급에 따라 획일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던 방식을 서비스별로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개인의 욕구를 반영하고자 한 것임. 또한 서비스가 권리로서 제공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통해 완결을 이뤄야 함
- 그러나 정부의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내용과 일정 등에 대해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음

2 계속 미뤄지는 탈시설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 제도 마련

- '19년부터 공공임대주택을 탈시설장애인에게 제공하고 자립정착금 지원 예정이었으나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으로 전환되면서 '20년 발표 예정이던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 발표 미진행
- 중앙('19)과 지역('20)에 탈시설지원센터 설치 예정이었으나 미진행
- 시설거주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보장과 학대 피해 방지를 위해 장애계는 탈시설정책 마련을 요구하고 정부는 이를 계획하였으나 일정이 계속해서 지연돼 이제는 실력과 의지가 의심되는 상황임



- 8월 발표 예정인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로드맵'에 주거와 활동지원, 의료서비스 연계 등 지역사회 생활이 가능하도록 구체적 지원계획과 예산이 반영되어야 함

3 장애인활동지원 제도 발전은 분명, 체감은 글썄

-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 확대, 급여 인상, 본인 부담금 경감 등 제도는 지속 발전하고 있지만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지원시간의 부족, 활동지원사의 연계 부분에서 당사자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 65세 이상 급여감소분에 대한 보전을 시작했지만 서울을 제외하고 지자체 추가 지원분에 대한 보전이 되지 않아 이용시간의 격차는 여전히 큼
-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 허용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은 '20.2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이상시 발달장애인 가족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이 외 추진되지 않아 결정이 필요함

4 불씨 꺼질까 불안불안한 장애인건강권 사업

-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참여가능한 중증 장애인이 98만명이나 1차 시범사업 참여의사가 361명으로 의사 1명당 2,700여명의 장애인을 담당하는 것이 비현실적임. 또한 1차 시범사업 참여장애인이 1,146명으로 사업대상자의 0.1%만 참여하고 있어 의사와 장애인 모두에게 외면받고 있음. 시범사업에 대한 홍보와 참여 혜택의 보완 필요
-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은 '19년까지 목표 달성률이 53%로 '22년까지 100개소 지정 계획을 '24년까지 이행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음. 공공어린이 재활의료기관 확충도 '19년까지 목표 달성률이 60%로 실적 부진으로 성과목표를 변경하였음
- 정부는 건강권 사업을 수행할 의료기관을 공모하고 있으나 공모에 참여하는 병원이 저조하여 일정이 지연되고 있음.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

으로 정책방향의 변경이나 참여 의료기관에 대한 혜택 강화가 수반되어야 함

2) 교육·문화·체육 형평성 제고를 위한 지원 체계 강화

1 진로교육 전문화 시도는 긍정적, 효과는 검증 필요

- 교육부 내 장애학생 진로교육 전담부서가 신설되고 특수학교의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특수학교 내 진로전담교사 배치 등 정부차원의 장애학생의 진로교육에 대한 관심 증대를 확인할 수 있음
- 장애청소년 진로교육은 체험기회 확대와 실습연계 등 현장중심형이어야 하며 지속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2 더 강화돼야 할 장애인 평생교육

- 국립특수교육원 내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를 설립하고 장애인평생교육 실태조사 실시,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20~22)'을 발표하는 등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전체 장애인의 54.4%가 중졸 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학령기 의무교육 과정에서 기회를 놓친 장애인들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 구축 필요

3 역대급 특수교사 증원, 특수학교 개교는 난항

- 특수교육교원이 '18년 이후 매년 1천명 이상 증원되어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이 66%('16)에서 79%('20)까지 확대됨
- '22년까지 특수학교 22교, 특수학급 1,250학급 확대 계획이었으나 특수학교 부지확보 지연과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개교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장애아동의 동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확보를 위해 특수학교 용지확보법 개정 등 계획 이행의 의지 필요

4 인지도 '0(제로)'인 재활운동 및 체육

- 재활운동 및 체육서비스 시범사업(안)을 '18년 마련하였으나 예산 미확보로 시범사업이 진행

6 당초 70개 세부과제였으나 5분야 세부과제 통합 변경됨

7 이행실적은 한국장애인개발원(2019),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모니터링 연구, 2021년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 회의자료를 참조하였음

되지 않음. 과기부 R&D 연구용역 과제로 선정되어 '21~'23까지 연구 예정이나 일정 지연이 불가피함

- 장애인건강권법 제정 이후 새롭게 도입되기를 기대했던 서비스가 시범사업 조차 진행되지 않아 아무도 모르는 사업으로 전락할 위기에 있음. 장애인의 건강 증진을 위해 재활운동 처방, 공공체육프로그램의 참여 기회가 속히 제공되어야 함
- 장애인체력인증센터가 '20 8개소 운영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목표 수치가 없으며, 재활-복지-교육 연계 프로그램 운영실적 확인이 어려움

3) 장애인도 더불어 잘 살기 위한 경제자립기반 강화

1 반쪽 인상에 그친 장애인연금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21년에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19.4월부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20부터 30만원으로 조기 인상됨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인상은 계획보다 조기에 이뤄졌지만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는 부가급여의 현실화,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장애수당의 단계적 인상 방안 마련 등은 이뤄지지 않아 소득보장제도의 확대에 한계가 있음

2 더디게 올라가는 장애인 의무고용율

- 장애인 의무고용율 2.76%('17) → 2.85%('18) → 2.92%('19)로 지속 상승하고 있으나 아직 3.0%에 미치지 못함. 또한 '19년 법령 개정을 통해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을 계획하였으나 법 개정이 진행되지 않음
-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도입된 지 30년 이상 흘렀지만 여전히 공공기관에서도 의무고용 달성이 미달되고 있으며 실적 채우기에 급급해 정규직보다는 단기 계약직을 채용하는 등 기형적 형태로 제도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음

3 근본적 대책 없는 일하는 장애인의 소득 향상

-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보전을 위한 근본적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음. 최저임금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의 근로능력에 대한 인정과 적절한 소득보장을 통해 근로의욕 고취 필요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매출이 장애인고용과 처우에 반영되도록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를 개선할 계획이었으나 추진되지 않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 구매비율 상향도 미추진됨

4) 다중적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의 권리 강화

1 민간부문까지 넓혀가야 하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의 의무화 이후 안정적인 운영과 도입을 위해 교육기관 위탁, 교육 콘텐츠 발굴, 전문강사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그러나 장애인인식개선 중장기 로드맵 마련, 장애인식개선교육 모니터링단 운영을 올해 하반기에 예정하고 있으며, 민간부문으로 교육의무 대상 확대는 아직까지 추진되지 않음
- 의무교육 없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는 것이 가장 긍정적이나, 교육 효과 확대를 위해 형식적 교육 진행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감독의 강화 및 민간부문까지 의무교육 확대 필요

2 조금씩 해소되고 있는 장애인 금융이용 제약

- 장애인의 금융업무 처리가 접근의 문제로 어려웠으나 '17.9월 자필서명 불가능한 장애인의 대리발급이 허용되고, '18.7월 은행 자동화기기(ATM) 관련 표준이 개정되어 일부 접근성의 문제가 보완되었음
- '20.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장애인 차별 금지 규정 명시됨. 금융기관 이용시 발생하는 제도적 어려움은 차츰 해결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기 위한 교육 강화 및 홍보 확대 등 병행 필요

3 걸음마 시작한 장애인 재난안전 지원정책

- 태풍, 홍수 등 자연재난뿐만 아니라 화재, 붕괴, 폭발 등 사회재난에 이르기까지 재난이 닥쳤을 때 장애인은 자력 대피가 어려운 실정임
- 제4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24)에 안전취약계층으로 장애인에 대한 대책이 언급되고, 지자체 재난관리평가에 장애인 안전관리 항목을 평가하도록 지표가 보완되었음
-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경보·피난·안전 설비기준 강화(편의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장애유형별 재난대응 안내서 개발 등이 진행되었지만 장애인 재난안전 대책은 초기 도입단계로 정확한 정책 마련을 위해 장애인의 특성이 반영된 재난안전 통계구축이 필요함

4 속력 내야하는 정신장애인 사회통합 지원

-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추가인력을 배치하였으나 목표 이행이 어려워 '22년까지 1,500명 계획을 1,165명으로 22% 목표값을 하향 조정하였음
- 정신장애인의 입원, 사회복귀 등에서의 권리보장을 위한 절차보조인 시범사업, 중간집(Halfway House) 시범사업이 진행되었으나 본 사업으로 제도화되어야 함
-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치료와 재활을 지원하고 사회통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도입과 일자리 지원, 인식개선 등의 국가적 차원의 노력 필요함

5 피해자 입장에서 돌아봐야 할 학대 및 폭력지원 시스템

- 장애인학대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중앙 및 시·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을 시작하고, 학대 피해자 쉼터를 13개소까지 설치하였음
- 성폭력 피해자 자립지원 공동생활가정을 1개소 추가 설치하였으나('19), 보호시설 퇴소 이후 피해

- 여성장애인의 자립지원체계는 구축되지 않음
- 학대 및 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해자로부터 신속한 분리와 심리적 안정 지원, 권리 보장을 위한 조력이 필요하고 퇴소 이후 안정적 정착을 위한 시스템이 피해자중심으로 마련되어야 함

5) 동등한 사회참여를 위한 기반 구축

1 장애인 정보접근성 높아졌지만 격차는 여전

- 장애인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해 정부는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 제작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 하지만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로 비대면 사회로의 급속한 전환이 이어지면서 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은 더욱 중요 영역으로 부상하였으나 장애인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여전히 비장애인의 4분의 3 수준에 머물고 있음
- 모바일 앱과 키오스크의 장애인 접근성을 위해 국가정보화기본법 및 시행령을 개정하였으나 시행대상을 공공분야에만 한정하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음

2 목표 소극적인 의사소통 보조기기 활용 서비스

- 장애인의 의사소통 능력 증진과 사회활동 참여를 위해 보완대체의사소통(AAC) 기기활용 중재서비스를 전국 확대하는 것을 계획하였음
- 의사표현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의사소통판, 출력기기 등으로 의사표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표준모델로 채택되어 지원을 시작함
- 그러나 대전 동구, 대전 중구, 경기도 성남시, 전라북도 남원시 4개 지자체에서만 운영하고 있으며, 성과지표가 '바우처사업 검토'로만 되어 있어 성과지표로 부적절

3 특별교통수단을 통한 광역간 이동, 저상버스 보급 지지부진

-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서 특별교통수단 법정



보급기준을 150명 1대로 기준을 완화하였고, 지자체별 상이하게 운영하는 특별교통수단 운영 방식에 대해 표준 조례를 마련하여 서비스의 표준화를 꾀하고 있음

- 표준조례에도 불구하고 도 지역 내 요금 및 이용시간, 대상자 등은 지자체별 차이를 보이고 있어 지역을 넘어서는 이동은 어려움
- 휠체어 비이용자를 위한 일반택시 활용의 제도화는 추진되지 않음. 휠체어 이용 여부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수요가 분산되지 않아 긴 대기시간, 목적지 제한 등 이용 불편은 여전함
- 특별교통수단 도입률은 목표를 초과달성하고 있지만, 저상버스 보급률은 실적 부진으로 목표를 변경하였음(22년까지 42%에서 35%로 목표 변경)
-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마을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고, 시외로 이동할 수 있도록 휠체어 탑승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시범운행을 진행한 것은 진보의 결과임. 그러나 장애인의 광역간 이동권 보장 차원에서 시범사업에 그치지 않고 제도화되어야 함

4 부분 수선보다 전체적으로 접근해야할 장애인 편의환경

-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위해 이동편의시설의 접근성이 확보되어야 함. 특히 5차 계획에서는 여객시설과 보행환경에 대한 이동편의 개선을 계획하였는데 여객시설의 편의시설 적합설치율은 초기보다 목표를 하향하였고, 보행환경의 편의시설 적합설치율은 초기보다 목표를 상향조정하였음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는 BF 의무화 및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추진되지 않음
- 다만 문화재시설의 유니버설디자인 모델 개발

및 가이드라인 보급은 '18~'19 동안 이행되어 장애인편의법에서 제외된 문화재공간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권이 향상될 전망이다

5 체감 어려운 UN장애인권리협약과 대한민국 장애인의 상관관계

- UN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해 우리나라는 2,3차 병합 국가보고서를 '19.3월 UN에 제출하였음
- 그러나 UN장애인권리협약 상시 모니터링을 위한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단 운영,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유보철회에 대해서는 진행되지 않았고, 성과지표가 단순히 국가보고서 작성여부인 것은 부적절함. UN장애인권리협약이 국내 장애인의 삶에 미친 영향과 연결될 수 있어야 함

05 문재인 정부의 남은 과제 7가지

- 문재인 대통령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삶, 삶의 격차 완화를 강조하는 정책 기조를 보임
- 아직 임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최종 이행 실적은 추후 재평가가 필요하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국정과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반영비중과 이행실적을 고려하여 남은 과제를 제안함
- 제안한 과제는 신규 과제가 아닌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의 약속이기에 남은 기간 동안 이행하여 약속을 지킨 대통령으로 기억되길 바랍

1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공약 1, 국정과제, 5차계획 1-1-2) & 탈시설장애인 자립지원 체계 마련(공약 5, 국정과제, 5차계획 1-2-1)

- 장애인의 개별 특성과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권리로 보장받기 위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 지역별 탈시설지원센터 설치 및 임대주택 확충 등 장애인의 주거권 강화와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정책 마련

2 장애인건강권 사업의 이행(공약 3, 국정과제, 5차계획 1-4-1, 1-5-1, 1-5-2, 2-5-1)

-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의 본사업화, 장애아동 건강주치의 추진
-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공공어린이재활의료기관·장애친화 산부인과 등 접근성 반영한 장애인 건강권 인프라 확대
- 재활운동 및 체육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이행

3 여성장애인지원법 제정(공약 6, 5차계획 4-4-1, 4-4-3)

- 법 제정 및 여성장애인 기본계획 수립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현실화, 폭력피해자 지원 체계 구축

4 장애인 소득보장 확대(공약 2, 5차계획 3-1-2, 3-2-1, 3-2-2, 3-3-4)

-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현실화, 장애수당 인상 방안 마련
- 근로장애인의 최저임금 보장,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근로장애인 처우 향상,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비율 상향

5 유니버설 디자인 환경 조성(공약 5, 5차계획 5-3-1, 5-3-2)

-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 웹접근권 등의

사회환경 조성 정책 수립 및 지원
- 유니버설디자인 환경 시범사업 실시
- 민간 건축물의 BF 의무화

6 장애인가족지원 확대(공약 8, 5차 계획 1-3-2)

- 발달장애인 관련 서비스의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 확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확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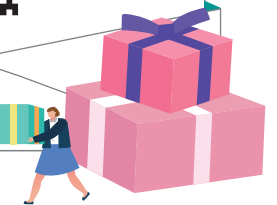
7 정신장애인 사회통합 지원(5차계획 4-1-4)

-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인력 배치
- 의사결정지원제도 도입
- 사회복귀를 위한 중간집(Half way) 모형 개발

'구독자 의견' 보내고 선물 받자!

정책리포트 구독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낀 점이나, 희망하는 주제를 보내주시면 반영하여 더욱 개선된 정책리포트로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참여방법 QR코드 촬영 후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세요.



월간 한국장총 www.kodaf.kr

발행일 2021년 6월 30일 발행인 홍순봉 편집인 김동범 창간일 1999년 3월 29일

제 작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4층 T.02)783-0067 F.02)783-0069

※ 이 인쇄물의 오른쪽 윗부분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보이스아이)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탈시설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 일시: 2021. 7. 15.(목) ~ 16.(금) / 1박 2일
- 장소: 호텔 푸르미르(경기도 화성시 안녕동 소재)
- 대상: 전국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총·처장급) 35명

[1일차] 7월 15일(목)		
14:00~15:00	장애인탈시설의 현황과 과제	유동철 교수 (동의대 사회복지학과)
15:15~16:15	장애인 통합돌봄에는 무엇이 담겨야하나?	김용득 교수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16:30~18:30	정책토론 및 네트워킹	
[2일차] 7월 16일(금)		
09:30~11:30	포스트 코로나 시대, 장애인단체의 나아갈 길을 묻다	방대옥 대표 (다음세대재단)

자세한 사항은 카카오톡채널 "역량강화교육 Up School"을 통해 확인하세요!

신청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홈페이지 접수 문의 | 역량강화교육 교육사업 담당자 02-783-0067

